

4·3 연구의 쟁점

박 찬 식

(제주대 평화연구소 특별연구원)

〈국문요약〉

4·3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갈등의 상처를 남겨놓았다. 1990년대 이래 국제적 냉전이 종식되었지만 남북·이념 간 대립구도는 여전히고, 특별법 제정과 대통령 사과로 제도적 해결 과정을 밟았지만 대참사의 여진은 지속되고 있다.

4·3의 기원과 성격에 대한 논의는 사태 진압과 체제의 정당성을 입증하는 데서 시작하여 1980년대 민주화운동 이후 항쟁 논의가 대두하면서 4·3에 관한 쟁점이 생겨났다. 2003년 확정된 「진상조사보고서」는 기초적인 사실에 근거한 공식 텍스트로서 주요 쟁점에 관해 충실하게 정리하여 놓았다.

그러나 아직도 4·3 연구 과정에서 드러난 쟁점이 여럿 남아있다. 4·3의 명칭과 성격을 둘러싸고 풀리지 않은 쟁점들이 존재한다. 앞으로 심화된 연구 성과를 통해 4·3의 정명 부여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4·3의 발발과 전개과정에 관한 쟁점은 ① 기점설 ② 남로당 중앙당의 개입 여부 ③ 4월말 평화협상의 실체 ④ 여순사건과의 연관성 ⑤ 계엄령의 불법성 문제 ⑥ 초토화작전의 실시 여부 ⑦ 미국·소련의 책임 문제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주제어 : 4·3사건, 냉전, 4·3특별법, 4·3사건진상조사보고서, 민주화운동, 항쟁, 정명

1947년부터 1954년까지 7년 동안 벌어진 4·3사건은 한국현대사뿐만 아니라 제주도 전 역사에서 가장 참혹한 비극 가운데 하나였다. 국제적 냉전과 국내적 분단으로 인한 외적 조건과 제주도 내부의 갈등이 결합된 이 사건으로 2만 명 이상의 제주민이 희생되었다.

4·3은 항쟁과 진압의 양측 모두 목적을 달성한 것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에게 갈등의 상처를 남겨놓은 채 미봉되었다. 1990년대 이래 국제적으로는 냉전이 종식되었지만 아직도 남북·이념 간 대립구도는 여전하고, 특별법 제정과 대통령 사과로 제도적 해결 과정을 밟았지만 제주도에서는 대참사의 여진이 지속되고 있다.

4·3 연구는 처음부터 현실정치권력과 이데올로기 차원의 문제로 다루어졌다. 4·3의 기원과 성격에 대한 논의는 사태 진압과 체제의 정당성을 입증하는 데서 시작하여 『제주4·3사건진상조사보고서』(이하 『보고서』로 약칭)가 확정될 때까지 일방적인 방향으로 전개되었다. 1980년대 민주화운동 시기 이후 항쟁 논의가 대두하면서 4·3의 본격적인 논쟁이 이루어졌고 쟁점이 하나둘씩 생겨났다. 2003년 확정된 『보고서』는 기초적인 사실을 실증적으로 분석·정리한 최초의 공식 텍스트로서 주요 쟁점에 대해서는 자료에 근거해서 충실하게 정리하여 놓았다.

그러나 아직도 4·3 연구 과정에서 드러난 쟁점이 여럿 남아있음은 엄연한 현실이다. 앞으로 심층적인 연구가 수행될수록 학문적 쟁점은 더욱 도드라질 수 있을 것이다. 다만 4·3은 아직도 실증적 사실 확인을 더욱 필요로 하는 연구 주제이기 때문에 추가 진상조사의 과제는 쟁점이 아닌 향후 연구 과제로 다루어야 할 것이다. 정치적·이념적 신념에 입각하여 4·3 논의를 전개한 글 또한 쟁점을 제기한 연구물로 다루기 힘들 것임을 전제하여 두고자 한다.

1. 4·3의 명칭

4·3의 명칭에 관해서는 4·3 발발 당시로부터 폭동, 사태, 반란, 사건, 무장봉기, 인민항쟁 등 항쟁 주체(인민유격대, 남로당), 진압의 주체(미국, 대한민국, 군·경, 우익단체), 제주지역민 또는 제주를 찾은 언론인·법조인 등에 따라 각각 다르게 쓰였다.

1948년 4월 3일 재산 유격대의 습격에 대한 미군정 당국의 공식적 반응은 “폭도들의 총선거 반대 폭동”으로서 즉각 소탕한다는 것이었다. 4월 중순 이후 무장대와 미군정이 심하게 대립하는 과정에서 언론매체의 인식도 상반되게 나타났다. 우익계 신문들은 ‘폭동’의 인식 기조를 유지한 반면, 중도좌익계 신문들은 ‘소요사건’, ‘무장봉기’, ‘제주도의 항쟁’, ‘제주도 인민봉기’ 등으로 보도하였다.

1948년 6~7월에 긴박했던 제주도 상황이 느슨해지자, 신문과 잡지 지면에는 4·3을 중립적인 입장에서 보려는 기사들이 늘어났다. 당시 제주 현지를 다녀간 기자들은 미군정 당국, 경찰의 입장과는 매우 다르게 4·3을 인식하고 있었다. 이제 언론을 통해 ‘4·3사건’이란 용어가 일반적인 사건명으로 인식되어 갔다. 또한 이 시기 4·3 관련 재판에 치러진 법조인들은 4·3을 ‘불행한 사건’으로 인식하고, 해결책을 제시하기도 했다.

그러나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 수립 후 4·3은 ‘해결해야 할 사건’이 아니라, ‘진압해야 할 반란’으로 인식되었다. 1948년 11월부터 1949년 2월까지 제주도 일원을 초토화시킨 대한민국 군과 관련된 신문 기사는 반도 및 폭도와의 전투에서 승전했다는 功績 사항으로만 채워졌다. 수많은 주민들의 죽음은 대한민국의 公的인 인식 대상에서 감추어졌다.

전쟁과 이승만 집권을 거치는 과정에서 ‘폭동·반란’으로 억압되었던 4·3 인식은 1960년 4·19 혁명을 거치며 다시 ‘사건’으로 환원되었다. 일부 ‘항쟁’의 인식을 공적으로 제기하는 노력도 있었지만, 5·16으로 좌절

되었다. 이후 반세기 동안 4·3은 국가 권력의 공적 인식만이 통용되는 시간이었고, 4·3의 논의 자체가 금기시되었다.

4·3에 대한 재인식은 1987년 6월 민주항쟁으로 비롯되었다. '항쟁' 인식이 학생층과 시민사회에서 제기되었고, 활발한 진상규명운동이 전개되었다. 그러나 4·3을 아직도 '폭동'으로 보는 정부의 인식과 여러 지점에서 대립하였다. 4·3의 공적 인식이 제 자리를 잡게 된 것은 2000년 4·3특별법의 제정과 2003년 4·3진상조사보고서의 확정, 대통령의 공식 사과 등 일련의 제도적 해결 과정의 결과였다. 이 과정에서 4·3의 명칭은 수많은 주민들이 희생당한 '사건'으로 제도화되었다.

2. 4·3의 성격

4·3에 대해서는 1970년대까지 냉전과 분단, 권위주의 정권 하에서 국가의 공식 견해가 지배적이었다. 1967년 국방부에서 펴낸 『한국전쟁사』가 대표적이었다. 이 책은 4·3을 제주도 남로당 세력이 대한민국의 건국을 방해하기 위하여 일으킨 폭동으로 파악하고 있다. 좌익(남로당)의 입장에서 4·3을 바라보고 있어 제주도민들은 좌익에 의해 선동된 객체로 다루어졌다. 군·경 토벌대에 의한 양민 학살은 의도적으로 은폐되었다.

한편 1963년 제주출신 재일동포 김봉현·김민주가 출간한 『제주도 인민들의 4·3무장투쟁사』는 주로 4·3 '무장투쟁'에 참여하였던 지도부의 입장에서 서술되어 있다. 제주도민이 '무장투쟁'을 일으키게 된 원인, 진전과정 등을 상세하게 서술하였다. 이 책은 연구서라기보다는 기록으로서의 증언자료집의 성격을 강하게 띤다고 할 수 있다.

1980년대에 들어오면서 미국 측 자료를 기초로 한 본격적인 연구 논문이 제출되었다. 존 메릴(John Merrill)이 1980년 '제주도 반란'(Cheju-do Rebellion)이란 석사학위 논문을 발표하였다. 이 논문은 탄탄한 근거 위에 과학적인 해석을 가한 첫 연구 성과란 면에서 그 중요성을 인정할

수 있다. 제주도의 역사적 맥락, 해방정국하 제주도내 좌우대립구도, 4·3의 전개과정 등을 구조적인 시각 속에서 살펴내고 있다. 4·3과 관련하여 확실한 기록 근거를 갖지 못했던 한국의 학자들에게 메릴의 논문은 4·3의 실상을 본격적으로 탐구하게 하는 기폭제 역할을 하였다. 특히 미국의 4·3에 대한 역할을 다시 한 번 확인하는 중요한 단서를 확보하게 되었다.

그러나 정작 이 논문에서 메릴은 미국측 자료에 나타난 사실 그대로의 정리에 충실한 나머지, 왜 미군정이 이러한 기록들을 남기게 되었는가에 대한 본질적 접근은 시도하지 않았다. 그는 4·3을 좌우익의 대립과정에서 발생한 제주도 무장대의 '반란'으로 결론을 내리고는 미군정의 역할에 대해서는 상당 부분 축소시켜 놓았다.

1980년대 후반 4·3을 민중항쟁으로 바라보는 인식이 대두하였다. 1980년대 후반의 격렬한 사회운동의 분위기는 4·3 연구에도 곧바로 반영되었다. 1988년 양한권·박명립 등의 소장학자들이 민중항쟁론의 입장에서 4·3의 배경, 전개과정을 다룬 석사논문을 발표하였다. 이들 논문은 한국 최초의 4·3 전문 연구로서, 4·3에 대한 기존의 인식틀을 교정하는 데 크게 기여하였다. 두 논문은 메릴이 처음 인용하였던 미군정 자료에 똑같이 의존하였지만, 그 해석을 달리하는 입장을 취하였다.

두 논문에 의해서 촉발된 민중항쟁론에 입각한 연구는 이후 고창훈·서중석·김창후·김종민·양정심 등으로 이어졌다. 이들 연구는 전 시기까지의 무장폭동론에 대한 반론으로 제기된 것으로서, 4·3을 제주민의 시각에서 보고자하는 관점의 변화를 가져 왔고, 4·3의 성격을 방어적 평화투쟁으로 인식하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 민중항쟁론에 입각한 연구 결과는 4·3 발발 50주년인 1998년 『제주4·3연구』로 일단 정리되어 현재 학계에서는 확고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한편 항쟁론의 입장도 항쟁 지도부의 이념 지향과 제주민의 지향점을 일치시키는 입장과 제주민의 정서·집단심성을 더욱 중시하는 입장 사이의 미묘한 차이를 보여주고 있기도 하다. 후자의 입장은 기존의 폭동론

이나 항쟁론, 희생자 조사보고서와는 달리 소외된 제주도민들을 역사의 주체로 인식해야 하며 이들의 경험을 중시해서 그 경험의 의미를 두껍게 읽어야 한다는 관점을 제기하였다. 무속을 통한 4·3 담론을 다룬 김성례의 연구, 사회적 기억과 사회심리를 분석한 권귀숙의 연구, 제주민의 자치의식을 토대로 공동체의식을 강조하고 사회주의 이념의 外皮론을 제기한 박찬식의 연구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이들 연구는 공통적으로 문헌자료보다 구술자료에 천착한다는 연구사적 특징을 지니고 있다.

발표자는 이러한 민중항쟁론에 대해 다음과 같이 문제 제기를 한 바 있다.

‘산사람’이 내걸었던 ‘반제’ 슬로건은 우리끼리 잘 살아보려는 삶을 차단시키는 외부의 규정력을 거부하는 데서 온 것이다. 슬로건이 아니더라도 민중에게 다가온 내용은 마찬가지였다. 이데올로기는 민중에게 먼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민중들이 자기 열망을 더 잘 담아낼 수 있는 것으로 선택하고 만들어 가는 것이다. 일제치하의 고통을 겪은 민중들이 반민족세력을 척결하면서 세워나가려 했던 자주적 국가는 미국의 간섭이 아니라면 자연적으로 이 땅에서 민중들의 힘에 의해 건설될 수 있는 정부 형태였을 것이다.

4·3의 기본적 대립구도는 제주민중과 미군정을 정점으로 한 외부세력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제주공동체 내부의 싸움이 아니었다. 4·3은 결코 제주도라는 작은 갇혀진 공간에서 발생한 우연한 사건이 아니다. 4·3은 “거대한 외압에 대한 지역민의 정의로운 저항”이었고, 제주도민의 공동체적 특수성이 저변에 깔려있는 사건이다. 4·3 당시 제주도민들은 좌우가 무엇인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낮에는 해안으로 밤에는 산으로 피해 다녔다는 식의 얘기는 당시의 시대성을 반영한다기보다는 후대의 피해인식의 소산이다. 자칫 이런 주장은 제주도민의 교육수준이 낮았고 중앙에서 멀리 떨어져 정세의 추이를 잘 몰랐으므로 좌익세력들의 선전 선동에 쉽게 휩쓸려 들어갔다고 봄으로써, 당시 제주도민을 비하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일제치하 제주도민의 강력한 항일투쟁,

해방직후 자율적인 사회운동 결사체의 조직, 높은 교육열, 일본·한반도 내륙과의 잦은 교류를 통한 정보의 유입 등 타 지역에 비해 결코 뒤떨어지지 않는 조건을 구비하고 있었다. 더구나 타 지역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공동체적 연대감, 어려운 자연 조건을 개척해 나가는 강인함 등으로 해방공간기 한반도에서 가장 이상적인 민족공동체를 형성해 나갈 수 있는 대표적인 지역이었다.¹⁾

이러한 공동체성이 친일파와 우익청년단에 의해 파괴되어 나가는 지점에서 4·3이 발발하였다는 점을 결코 놓쳐서는 안 될 것이다. 이런 점에서 4·3은 제주도의 특수성과 제주도민의 자존심이 담긴 역사적 사건으로서 그 당위성이 성립되는 것이다. 민중사적 역사인식의 본보기로 자리 잡아야 한다.

4·3 당시 제주 민중의 지향점은 주변부에 처해 있는 독자적인 단위로서의 제주도에 미쳐진 세계냉전체제, 한반도 중앙권력의 물리력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데 두어졌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여기에는 국가주의적 이념이 개입할 여지가 없다. 과거 독립된 단위로서 자율성을 나름대로 추구하던 섬 공동체에 가해진 외부로부터의 압박은 자연스레 섬사람들을 하나로 뭉치게 하였을 것이며, 이때 이들을 조직해낸 것은 지도부의 사회주의 이념이었을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제주도 남로당의 사회주의

1) 4·3붕기가 한창 진행 중이던 1948년 8월 제주도 현지를 취재한 「신천지」 기자 홍한표가 기술한 다음의 기사는 이러한 제주도의 지역성을 대변한다고 보인다. “금반의 사건에 참가한 사람들은 직접과 간접의 반란群측과 監警과의 두 개의 세력이며 그 대립이다. 이에 대하여 혹자는 부인하는 편도 있으나 첫째 도민의 역사적 전통, 둘째 도민은 누구나 친척관계에 있다는 것, 셋째 배타적이라는 것, 넷째 과거부터 육지사람이라면 걸인쯤으로 생각하여 도대체 상대를 잘 하지 않는다는 것, 다섯째 도민의 자존심은 실질적으로 그 수준에 있고 없음을 막론하고 아무튼 자기들의 수준이란 조선의 어느 곳보다도 뒤떨어진 것이라고는 생각지 않고 있다는 것, 여섯째 중간층이라는 것은 제주에서는 거의 없다는 것, 일곱째 도민의 전통적 용맹성, 여덟째 이기심이 발달되지 않아서 정의나 공동의 이익에 대하여는 언제나 동일보조를 취한다는 것, 아홉째 생활력의 강성, 열째 전투에 대한 자연조건의 우위성 등으로 보아 과거에 반대측과 행동을 같이하던 그런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도민의 주요세력과 행동을 달리 할 수는 없다.”(「동란의 제주도 이모저모」, 「신천지」 1948년 8월호)

이념은 섬사람들을 조직화시켜낸 사상적 외피에 불과하다.

3. 4·3의 발발과 전개과정

4·3의 발발과 관련해서 기점을 1947년 3·1사건과 1948년 4·3봉기 가운데 무엇으로 삼느냐의 문제가 쟁점으로 부각된다. 폭동론의 시각에서는 4월 3일 인민유격대의 폭력적인 살상 행위에 초점을 두기 때문에 1948년 4월 3일 특정일을 강조하였다. 반면 항쟁론의 관점에서는 무장투쟁이 일어날 때까지 과정을 중시하며 그 단초로서 민간인 6명이 군정 경찰 발포로 사망한 1947년 3월 1일에 주목하였다. 4·3특별법과 『보고서』는 수많은 사람이 죽어나간 사건의 객관적인 실상에 주목하는 입장에서 1947년 3월 1일 기점의 입장을 선택하였다.

4·3의 발발을 둘러싼 가장 치열한 논쟁은 남로당 중앙당의 무장투쟁 지령이 있었는지 여부를 둘러싸고 벌어졌다. 우익적 시각에서 소련과 북한의 개입설까지 제기된 바 있으나 근거를 갖지 못한 견해로 밝혀졌다. 봉기 발발 후 남로당 중앙당의 추인이 있었고 전남도당 조직원이 4·3봉기 결정에 개입했음은 분명해 보이나, 현재까지 중앙당의 계획적인 결정임을 밝혀주는 자료는 문건이나 증언록 모두에서 확인되지 않는다. 오히려 김달삼의 해주인민대표자대회 연설문, 유격대가 자체적으로 작성한 「제주도인민유격대보고서」 등과 무장봉기를 결정한 신춘희의 참석자 이삼룡의 증언 등은 제주도당의 자발적인 결정임을 확인시켜 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개 도당 차원에서 중앙당에 보고·협의 절차도 없이 무장봉기라는 최고의 투쟁 수위를 결정할 수 있는지는 의문이다.

남로당 제주도당의 무장봉기 결정에 대한 역사적 평가에 대해서도 많은 논점의 차이를 드러내고 있다. 우선 5·10선거를 거부한 사실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정부 수립을 거부한 반란 행위라는 견해와 단독선거를

반대한 통일운동으로 보아야 한다는 견해가 대립하고 있다. 무장봉기 이전 경찰과 서청의 테러, 고문치사 사건, 제주도민에 대한 편견과 무시 등이 일시에 폭발한 것으로 생존권을 지키기 위한 움직임으로 보는 견해도 상당수 있다. 그러면서도 4월 3일의 폭력 행위로 인해 이후 수많은 제주도민이 희생되는 빌미를 제공했다는 측면에서 '과오', '모험주의'였다는 지적도 다수 제기되었다.

한편 경찰 출신의 모씨가 비장하여 왔던 「제주도인민유격대보고서」는 지금까지 알려진 4·3 자료 가운데 재산 유격대의 동향을 파악하고, 특히 중앙당지령설을 정면으로 반박할 수 있는 유일한 기록이라고 할 수 있다. 일부 연구자는 경찰출신자가 소장한 자료라서 신빙성을 의심하기도 하였다. 그러면서도 이 자료에 나타난 9연대 남로당원의 중앙당 지령 부인은 사실로 받아들이고 있다. 제주4·3연구소가 1993년 대정지역의 4·3을 조사할 때 채록했던 김○○의 증언이나 여타의 증언들을 이 자료의 내용과 대비하여볼 때 정확히 일치하는 부분이 있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었다. 따라서 이 자료에 대한 정밀한 사료비판을 수행한다면 유격대에 관한 매우 중요한 자료를 확보한 셈이 되는 것이다. 2005년 장윤식이 이 자료를 토대로 집중 검토한 유격대의 조직과 활동에 관한 연구 성과는 참고할 만하다.

4월 말에 성사된 김익렬 9연대장과 김달삼 유격대총사령관 사이의 평화협상에 대해서는 제민일보 4·3취재반이 입수한 「김익렬유고록」의 내용에 의거해 많은 새로운 사실이 밝혀졌다. 미군정 당국의 평화협상 제의, 협상의 경위 및 내용, 미군사령부 지도부의 강경입장 선회, 평화협상 결렬, 미군의 오라리 방화사건 개입 등 4·3 초기 미군과 국방경비대, 유격대 사이에 있었던 중요한 사실들이 유고록을 통해 규명되었다. 「보고서」는 이 내용들을 토대로 평화협상 관련 내용을 서술하였다.

최근 김익렬이 평화협상 직후인 1948년 6월에 작성한 「참전기」가 발굴되었는데, 이를 활용한 김용철의 논문이 발표되어 더욱 치밀한 논쟁

이 제기되었다. 사건 발생 후 20여 년이 지난 후에 기록한 「유고록」에 비해 「참전기」는 1948년 8월에 『국제신문』에 게재되었다는 현실적 제약 조건을 감안하더라도 당대의 생생한 기억을 담고 있는 중요한 자료라고 하겠다. 지금까지 협상일을 4월 28일로 추정했던 것을 「참전기」는 정확히 4월 30일이라고 알려주고 있다. 5월 1일 메이데이를 계기로 강화될 수 있는 유격대에 대해 4월 27일부터 29일까지 격렬한 소탕작전을 전개한 끝에 유격대 쪽으로부터 회담 수용 의사를 전달받았음을 밝혔다. 4월 22일부터 선포문 산포로부터 회담, 회담 일자 조정 이유 등에 이르기까지 경위를 일시에 맞추어 정확히 기록하여 놓았다. 오후 4시에 회담을 마치고 돌아온 뒤 당일 밤에 열린 작전회의에서 최고지휘부가 유격대의 근거지를 확인했으니 총 공격을 개시한다는 명령을 내림으로써 회담이 미군의 전략에 따른 것이었음을 공개하였다.

김용철은 「참전기」를 근거로 평화협상에 대한 미군의 기대가 애초에 없었으며 오라리 방화사건의 조작설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발표자 또한 4월 28일을 협상 날짜로 보았을 때 가졌던 가장 큰 의문이 협상 직후인 4월 29일, 30일에 연이어 오라리의 우익단체원을 대상으로 한 유격대의 공격이 있었다는 사실이었다. 오라리 방화 장면을 보여준 동영상 필름 「제주도의 메이데이」는 4월 30일 밤 작전회의에서 총 공격 명령이 내려진 다음 날인 5월 1일 대대적인 공세가 펼쳐졌음을 보여주는 자료가 아닌가 한다. 오라리 방화사건의 조작 여부가 본질이 아니라, 미군 수뇌부의 총공세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 핵심이라고 하겠다. 결국 『보고서』가 밝혀낸 하지 24군단 사령관의 강경진압에 대한 입장을 「참전기」가 더욱 확고하게 입증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자료라고 생각한다.

다음으로 4·3 대학살의 배경에 대한 논쟁을 간단히 언급하고자 한다.

우선 여순사건과의 연관성 문제이다. 과연 미국과 대한민국 정부의 의도대로 14연대의 제주도 투입과 진압이 이루어졌다면 어떠했을까? 여

순사건의 발발로 인해 제주도의 대규모 민간인 학살이 더욱 심해졌다고 보아야 할 것인가?

4·3은 여순사건의 직접적인 도화선이 되었으며, 또한 여순사건 때문에 4·3에 대한 진압의 강도는 더욱 드세어졌다. 결국 두 사건은 상호 영향을 미치며 모두 집단적 민간인 학살로 귀결되었다. 10월 11일 제주도경비사령부 설치, 10월 17일 송요찬 9연대장의 포고령 발표, 10월 19일 여순사건 발발, 11월 17일 제주도 계엄령 선포 등으로 이어지는 일련의 과정 속에 여순사건이 놓여 있다. 14연대의 투입으로 제주도에 대한 강력한 진압은 예정되어 있었다. 그러나 여순사건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과연 제주도에 계엄령이 선포될 수 있었을까 의문이다. 계엄령은 대한민국 정부가 여순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내린 조치로서, 무자비한 진압을 가능하게 했던 배경이 되었다. 특히 계엄령이 선포된 이후 제주도 민간인 대학살이 본격 전개되었다는 점에서 여순사건의 처리 경험이 제주도에 반영된 것으로 보아야 하지 않을까한다. 향후 4·3과 여순사건에 대한 밀도 있는 비교 검토가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계엄령의 불법성 문제이다. 대한민국 정부의 계엄법이 제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일제하 시행되던 계엄령이 효력을 갖는지가 논쟁의 핵심이었다. 제민일보 4·3취재반과 김순태·김창록 등 법학자 등이 그 불법성을 지적하였고, 법제처는 반론을 제기하였다. 그러나 4·3 당시 이인법무부장관조차도 계엄령이 '현지 군사령관'에 의해 선포된 것이라고 하였고, 현지 군 장교들은 자의적으로 계엄령을 해석하여 집행하였다. 법제처의 주장대로 일제 계엄령을 법적 근거로 삼았더라도 무차별 민간인 학살을 인정해 준 조항은 어디에도 없다는 것이다.

4·3 당시 군법회의에 회부되어 희생된 민간인들에게 적용된 국방경비법에 대한 문제점도 학계의 논쟁이 되었다. 계엄시기가 아닌 상황에서 한라산에 피신했다가 내려온 주민들에게 국방경비법 32·33조를 무리하게 적용하여 군법회의에서 중형을 언도받은 사례에 대해 『보고서』는 적

법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지적하였다. 현재 학계에서 국방경비법이 유령법이었음을 지적하는 연구 결과가 나오고 있는 실정인데, 법 적용의 타당성·정당성 여부를 가리는 것이 앞으로의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앞으로 4·3 당시 적법 절차를 밟지 않은 국가의 과오에 대해 정확한 법적 용어와 술어를 동원하여 명징하게 검토해야 할 것이다. 1949년 목포형무소 탈옥사건에서 4·3 관련 재소자들이 다수 희생되었는데, 권승렬 법무부장관이 국회에 보고한 자리에서 탈옥자의 무차별 사살에 대한 사과를 하면서도 군의 진압 과정에서 행한 사살에 대해서는 소관 사항이 아니라고 회피하였다. 당시 국정 집행체계 하에서 책임 여부를 규명해야 할 것이며, 군의 탈옥수 사살은 적법한 절차였는지도 따져봐야 할 사안이다. 향후 4·3 희생자 전체에 대한 국가의 법적 절차 준수 여부에 대한 법리적·법사학적 검토가 필요가 있다고 보인다.

다음으로 '초토화작전' 실시 여부의 문제이다. 유태하는 4·3 토벌작전에서 한국군이나 미군이 초토화작전이라는 용어는 사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 용어는 타당하지 않다고 지적하였다. 『보고서』에도 '초토화'라고는 하였지만, '초토화작전'이란 용어는 쓰지 않았다. 김무용은 이에 대해, 초토화작전에 대한 규정은 단순히 용어의 사용 유무가 아니라 게릴라 토벌 과정에서 적용되는 작전 내용과 성격, 곧 방화와 학살, 강제이주와 집단수용 등을 포괄적으로 고려한 개념으로 보아야 한다고 반론을 제기하였다. 그 전술과 내용이 초토화에 해당한다고 본 것이다.

1948년 10월 10일부로 대통령으로부터 고등군법회의 관할 권한을 인가 받은 제주 진압부대(국방경비대 제9연대)의 명칭은 '숙청부대'였고 그들의 작전 내용은 '숙청 행동'이었다. '숙청'의 의미는 청소, 초토화와 다를 바 없는 것이다. 주한미군사령부의 정보보고에 기록된 9연대의 '민간인 대량학살 프로그램(program of mass slaughter among civilians)'을 곧 초토화작전으로 보는 함옥금의 견해도 있다. 김익렬의 「유고록」

에도 당시 군의 진압작전을 '초토작전'이라고 명명한 바 있다.

마지막으로 미국의 책임 문제에 대한 쟁점이다. 『보고서』의 결론에는 "4·3사건의 발발과 진압과정에서 미군정과 주한미군사고문단도 자유로울 수 없다. 이 사건이 미군정 하에서 시작됐으며, 미군 대령이 제주지구 사령관으로 직접 진압작전을 지휘했다. 미군은 대한민국 수립 이후에도 한미 간의 군사협정에 의해 한국군 작전통제권을 계속 보유하고, 제주 진압작전에 무기와 정찰기 등을 지원하였다. 특히 중산간마을을 초토화시켰던 9연대의 작전을 '성공한 작전'으로 높이 평가하는 한편 군사고문단장 로버츠 준장이 송요찬 연대장의 활동상을 대통령의 성명 등을 통해 널리 알리도록 한국정부에 요청한 기록도 있다."고 하였다.

이에 대해 김광동 등이 작성한 『제주4·3사건의 본질과 「제주4·3진상조사보고서」 문제점 연구』에서는, "희생자에 대한 제1차적 책임소재는 무장반란을 일으킨 남로당과 공산주의세력에게 있는 것이며, 4·3사건의 성격은 미군정 체제를 부정하고 대한민국 건국을 저지하며 공산주의 체제를 수립하고자 했던 무장반란에 있음은 명백한 것이다. 제주 남로당의 4·3 무장반란은 소련의 한반도 공산화 전략에 영향을 받은 친소·반미투쟁이었다. 제주 남로당의 4·3 무장반란이 대량의 희생 야기 및 반란의 장기화로 가게 된 원인은 소련체제 및 공산주의의 본질과 공산주의 세력의 혁명적 목표와 대응 방식을 이해하지 못한 미온적이고 단호하게 대응하지 못한 당시 미국의 대한반도 정책과 한국 정부의 안이한 대처로 더 확산되고 장기화되었다. 제주 남로당의 4·3 무장반란과 무차별적 학살만행이 제주 주민의 대량 희생의 책임의 당사자이다."라고 반론을 제기하였다.

허호준은 4·3과 그리스내전을 비교 검토함으로써 미국의 냉전체제에 대한 강경한 입장을 확인하였다. 김광동 등의 연구는 이에 반해 소련의 전세계적인 공산주의 체제 확장의 결과로서 4·3을 해석하려는 입장을 표명하였다. 그러나 구 소련의 1차자료를 근거로 하지 않은 글이라서

신뢰를 얻기에는 아직 미진하다고 평가된다.

한편 허호준은 4·3 당시 제주도에 파견된 미군 고문관들을 미국 현지에서 인터뷰한 내용을 중심으로 미군의 고문관들의 대량학살 개입 사실에 의문을 표시하였다. 그러나 주한미군사령부의 정보보고에 드러난 9연대의 대량학살계획 기록이 그들의 보고가 없었다면 가능했을지 의문이다. 4·3위원회 진상조사팀이 미국 국립문서보관소를 방문했을 때 목록에서 확인한 4·3 관련 비밀문서를 입수하는 데 실패한 사실은 아직도 미국의 4·3 개입 정도를 확인하는 데 현실적인 제약이 있음을 보여준다고 하겠다.

참고문헌

- 양한권, 「제주도 4·3폭동의 배경에 관한 연구」, 서울대 석사논문, 1988.
박명립, 「제주도 4·3민중항쟁에 관한 연구」, 고려대 석사논문, 1988.
고창훈, 「4·3민중항쟁의 전개와 성격」, 『해방전후사의 인식』 4, 한길사, 1989.
김창후, 「1948년 4·3항쟁 -봉기와 학살의 전모」, 『역사비평』 20, 1993.
제민일보 4·3취재반, 「4·3은 말한다」 ①~⑤, 전예원, 1994~1998.
김종민, 「제주4·3항쟁 -대규모 민중학살의 진상」, 『역사비평』 42, 1998.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제주4·3사건진상조사보고서」, 2003.
장윤식, 「제주4·3사건 초기 '무장대'의 조직과 활동」, 『4·3과 역사』 5, 2005.
박찬식, 『4·3과 제주역사』, 도서출판 각, 2008.
양정심, 『제주4·3항쟁』, 도서출판 선인, 2008.
김광동·모준영·이지훈, 「제주4·3사건의 본질과 「제주4·3진상조사보고서」 문제점 연구」, 재향군인회 안보문제연구소, 國正協 사무처

[공편], 2009.

허호준, 「제주4·3무장봉기 결정과정 고찰」, 『4·3과 역사』 7, 2001.

허호준, 「냉전체제 형성기의 국가건설과 민간인 학살 : 제주4·3사건과 그리스내전의 비교를 중심으로」 제주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0.

<ABSTRACT>

Issues of Jeju 4·3 Incident researches

Park Chansik

(Fellow, Institute of Peace in Jeju University)

4·3 Incident left the wound of discord in the numerous people.

Internationally since the 1990s the Cold War ended, ideological confrontation remains. The special law was established and President apologized, but the aftershocks of holocaust are continued.

The argument which treated the era and character of 4·3 Incident started from proving the justifiability of situation suppression and the government. Discussions of protest was emerging since the 1980s democracy movement, and from this time the issues about 4·3 Incident were originated. The fact-finding report which was decided upon at 2003 is the official text based on the fundamental facts, and it arranged important issues well.

But yet remains many issues from 4·3 Incident research process. About name and character of 4·3 Incident the issues which are not

solved exist. I expect to be confirmed the official name of 4·3 Incident through precise research of the future.

Key words : 4·3 Incident, the Cold War, The special law of 4·3 Incident, The fact-finding report of 4·3 Incident, democracy movement, protest, official name